

■ 논평 I

“물고기, 어업 기술, 민족 관습: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연구”에 대한 리뷰 (1)

서 대 승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저자는 식민지 기간에 존재했던 문화적 지속성의 문제를 ‘민족 관습’<sup>1)</sup>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 고자 한다. 이 때문에 그는 “근대의 모든 것이 식민자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었다는 이른바 식민 담론(40쪽)” 및 “식민지 수탈론과 개발론이 함께 전제하고 있던 근대성을 비판하고, 최근의 연구 경향인 “식민 주체와 피식민 주체 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함축하는 식민성을 강조(40쪽)” 하는 방식과도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이 후자에 대한 비판은 이 글 전체의 논지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식민지 기간동안 형성되는 “민족 담론”은 보여 줄 수는 있어도 근대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민족성 자체”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 진행되었던 민족성의 ‘생산’ 과정보다는, 식민지 이전에 이미 일정한 정도로 형성된 민족성<sup>2)</sup>이 식민지 시기에 ‘지속’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이 문화적 지속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선과 일본에서 선호되는 어종의 차이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민족 관습’을 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저자의 관점은 기존의 식민지 상황에서의 조우가 근대성의 형성 과정임을 강조하는 연구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것이다. 또한 물고기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히는 문화사적 기원에 대한 탐구도 인상적이다. 특히, 조선의 조기 및 일

---

1) 저자는 에스니시티(ethnicity)를 통상적 번역어인 ‘종족성’ 대신 ‘민족성’으로 번역하고 있다(39-40쪽). 이는 그가 식민지라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에 대한 관심보다, 식민지 이전인 19세기 후반에 이미 조선과 일본 각각에 형성되어 있던 ‘민족성’과 그 유지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국민문화’가 근대 교육과 행정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창출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Gellner 1983)도 있으나, Smith(1986)의 지적처럼 이들의 주장은 ‘문화’에 의해 통합된 국가모형을 오직 근대국가에 서만 찾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전근대국가라고 하더라도 지역·신분·친족에 의해 분할된 공동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을 초월하는 일정한 공유의식을 지닐 수 있다. 조선과 일본에서 특정 음식과 맛에 대한 선호는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늦어도 19세기 후반에 (향후 국민국가의 바탕이 되는) 이미 민족적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판단된다”(42쪽).

본의 도미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고기가 되는 문화사적 과정은 저자의 글에서 단지 역사적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이중어업구조”(75쪽)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sup>3)</sup> 식민지 시기에도 조선의 재래식 어업은 일본식 어업으로 대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일본 시장에서의 수출을 위한 어업이 재래식 어업과 함께 발전해가는 상황이었던 것이다(72쪽).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논의를 ‘문화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사회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승되는 실천양식이자 그러한 실천양식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 ‘문화적 사실’이 식민지라는 특수한 맥락과 만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조선에서의 식민지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조경달의 논의를 인용(41페이지)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특히 저자가 본문의 마지막에 제시한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분석”에서 문제가 된다. 이 논의의 구도에 따르면, 조기와 도미로 대표되는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이 각자의 수요를 충족한 후, 보다 이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경제적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과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쩌면,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다시 논의를 저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식민지 상호작용론’의 관점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식민지적 상황이 단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분석”과 더불어, 소위 ‘정치’인류학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본다.<sup>4)</sup>

저자는 경제인류학적 접근을 “경제 행위를 문화 속에 자리매김하는 경제인류학적 관점”(75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자가 제시한 식민지기 어업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에서의 경제적—하지만 경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수요에 대한 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경제적 수요를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민족 관습’이나 ‘문화적 사실’과 같은 문화적 수요로 중층화하는 것만으로 이를 ‘경제인류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꼬마로프 부부는 1991년에 출간한 “계시와 혁명: 남아프리카에서의 기독교, 식민주의,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식민지 상황에서 근대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들에 따르면, 식민주의적 의식은 단지 서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식민지인들과의 조우 과정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근대적 기획 과정에 츠와나(Tswana)인들이 참여하는 이외에, 과연 츠와나인들의 독자적 기획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sup>5)</sup>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츠와나의 문화나 관습과

3) “개항 이후 조선해에서 선호 어종의 차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적 층위로 인해 “상호종속적이지 않은” 두 가지 어업 구조가 공존하며 동시에 성장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4쪽).

4) 다만, 저자가 문화와 경제라는 차원에 집중하는 이유는, 식민지기의 정치 상황 및 조선 어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조하는 방식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식민지기 근대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 확대와 함께 어업기술이 ‘발전’”(74쪽)했다는 경제적 현상을 잘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상황의 권력관계 속에서 “민족 관습”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탐구는, 저자가 강조하는 “문화적 사실”의 존재 및 존재의 이유(문화사적 기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대화 과정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지속’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기독교라는 서구적 기획이 피식민지인들에게 전유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분석 이외에, 토착 문화가 식민지 기간 동안 존재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오트너는 이 논쟁을 리뷰하면서 꼬마로프 부부가 지배와 저항과 같은 “권력 에이전시”(power agency)에 대해서는 설명했다. “지향성의 에이전시”(agency of intentions), 즉, 상대방의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소홀했음을 지적한다(Ortner 2006: 144).

저자의 식민지기 어업에 대한 이 글은 오트너의 용어를 빌리면, 꼬마로프 부부의 사례와 반대로 ‘지향성의 에이전시’를 설명하는 데는 충실하지만, ‘권력 에이전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언뜻 무질서해 보이는 한일 바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힘에 의해 계속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바다는 지리적인 지대뿐 아니라 문화적인 지대이며 이질적인 관습과 문화가 부딪치며 혼합되는 공간”(78-79쪽)이라고 말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제시되는 문화적 ‘지속’에 대한 관점과 달리, 재구성, 혼합과 같은 용어들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 참고문헌

- Comaroff, J., & Comaroff, J. L., 1991,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aroff, J. L., & Comaroff, J., 1997,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The dialectics of modernity on a South African frontier (Vol.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rtner, S. B., 2006, *Anthropology and social theory: Culture, power, and the acting subject*. Duke University Press.

---

5) 1991년에 출판된 이 책에 츠와나인들의 행위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들에 대해서, 꼬마로프 부부는 1997년에 출판된 속편의 서론에서 이 비판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시도하고 있다(Comaroff & Comaroff 1997 참조).

## “물고기, 어업 기술, 민족 관습: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연구”에 대한 리뷰 (2)

이 경 목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 1. 도미와 향신료의 차이: 논리와 힘

오창현(이하 저자로 칭함)의 논문은 두 개의 결론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매우 강력하고 논쟁적이에요, 다른 하나는 매우 일반적이다. 그 첫 번째가 ‘도미가 조선의 식민화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요,<sup>6)</sup> 두 번째가 ‘동북아의 바다는 이질적인 관습과 문화가 부딪치며 혼합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sup>7)</sup>. 리뷰어가 볼 때 첫 번째는—저자 스스로가 ‘확대해석’이라고 조심스레 단서를 달았듯—무리수이거나 너무 빠른 듯 보이고, 두 번째는 결론이 되기에는 너무 밋밋해 보인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서양사에서 『설탕과 권력』의 예에서 설탕의 역할이나, 중세유럽에서 향신료가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한 원거리 무역이) 이후 식민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은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논리인, 도미가 조선의 식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위 문장은 왜 어색해 보이는가? 개략적인 대답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15-16세기 유럽시장에서 정향(clove), 육두구(nutmeg) 등의 향신료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비쌌고 네덜란드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할 당시 무역상은 평균 160배의 이익을 남겼다. 한 때 산지와 유럽시장에서의 육두구의 가격은 600배까지 이르기도 했다. 둘째, 원거리 무역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셋째, 원거리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같은 논리’의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향신료의 ‘힘’과 그것의 효과에 대한 추적과 도미의 ‘힘’과 효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6) “사회적 관습이나 욕구와 관련된 사물은 기술 유통 소비 등을 포괄하는 물질세계를 강력하게 정향해 나갈 수 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많은 서일본의 영세 어민들은 도미를 잡기 위해 타국 조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해협을 건너왔다. 일본 어민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조선해로 넘어와 일본 제국주의의 ‘선구자’가 된 것은 결국 도미를 향한 일본인의 놀라운 수요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대 해석해보면, 특정 어종에 대한 민족적 선호라는 문화적 사실이 ‘조선의 식민화’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76쪽)

7) “이처럼 얼핏 무질서해보이는 한일 바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힘에 의해 계속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바다는 지리적인 지대뿐 아니라 문화적인 지대이며 이질적인 관습과 문화가 부딪치며 혼합되는 공간이다.”(78-79쪽)

만약 출발점으로서의 도미의 ‘힘’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효과의 스케일이 ‘식민화’의 상당부분을 포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위의 결론은 유럽의 향신료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설명력을 지녔을 것이다. 즉 두 문장의 차이는 논리가 아니라 힘에 있다.

한편, 동북아의 바다가 문화와 관습이 충돌하는 장이라는 결론은 주어의 자리에 다른 것들—동남아의 산악지대, 한국의 도미/조기 시장 등—을 바꾸어 넣어도 괜찮을 정도의 (지나치게 큰) 범용성을 지닌다.

## 2. 세 가지 분석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

저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의 선호어종의 차이 즉 일본-도미/한국-조기의 대조를 키워드로 삼아 세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그 분석은 ① 어업기술의 차이와 민족 관습의 차이, ② 선호어종 (주로 일본에서의 참도미)의 문화사적 기원, ③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것이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물고기 어업기술 그리고 식민시기에 대해 상식 수준 이상의 지식을 지니지 못한 나는, 이 논문이 기반하고 있는 자료와 이전의 논쟁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평을 할 수 없다. 이하의 리뷰는 오직 저자의 주장과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제시한 논리에 집중하겠다.

리뷰어가 볼 때, 본 논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기보다는 ‘세 논문의 묶음’이다. 각각의 분석은 조기와 도미 (특히 도미)를 ‘실마리’로 하여 각기 다른 층위의 현장을 다룬다. 반면, 저자는 ①, ②, ③을 통째로 다루기 위해 두 개의 개념적 도구를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문화적 사실’이요, 두 번째가 경제인류학적 관점 즉 경제가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공리이다. 이 두 개의 개념적 도구에 기대어 논문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민족 관습의 특수한 예인 선호어종 즉 한국-조기와 일본-도미 두 쌍은 문화적 사실이다. 조선의 조기(와 도미)와 일본의 도미는 오랜 시기에 걸쳐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획득하였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장기 지속의 층위에 속하는 선호어종은 일본 어민의 초기 통어 패턴에서 시작하여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문화에 매몰된 경제’의 예이다.’<sup>8)</sup>

‘세 논문의 묶음’인 것 같이 보인다는 나의 인상은 ‘문화적 사실’과 ‘문화에 매몰된 경제’라는 개념적 도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기반 한다. 반면 각각의 ‘현장’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

8) 저자 역시 매우 유사한 논지의 문장으로 논문 전체를 정리한 바 있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민족 관습 즉 문화적 사실이 식민지 시기 경제 행위와 구조를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경제행위를 문화 속에 자리매김하는 경제 인류학적 관점에서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다.”(75쪽)

### 3. 세 개의 분석에 대한 요약

이하의 요약은 저자가 제시한 두 개의 연결고리 즉 ‘문화적 사실’과 ‘문화에 매몰된 경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아래 세 개의 분석은 각각 개별적인 논문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1) 어업기술의 차이와 민족 관습의 차이: 문화에 매몰된 기술

19세기 말 서일본의 어민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으로의 출어는 일본 연안에서 보다 수익성이 높았으나,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익숙하지 않은 낯선 바다로의 통어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이 과감한 도전의 이유는 두 번째 분석에서 주로 제시되었다.-

통어한 일본 어민들이 어획한 어종은 전복과 해삼 등과 같이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모두 선호하고 비싸게 팔렸던 것, 정어리와 새우처럼 조선과 일본 모두 선호하지만 가공과 소비 방식이 다른 것, 도미 상어 삼치와 같이 기호가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뉘었고(46쪽 참조), 그 중에서도 “도미는 ‘조선에 내어하는 경우 일본 어부의 과반수가 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며, 사실상 이 어업이 일본인 통어의 출발점이 된 어종’(50)이었다.

삼치, 도미, 상어 등은 조선 연안에 풍부하게 서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민들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획하지 않았다. 통어 초기에, “기호상의 차이에서 일한 양국인의 어업 경영은 저절로 두 분야로 나뉘었다. 하나는 조선인이 선호하는 조기 명태 대구 청어 민어 준치 등의 어종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도미 삼치 장어 방어 등이다.”(48) 조기 vs. 도미로 대표되는 이러한 차이는 조선에서 조기와 명태 등이 신과 조상에 바치는 공물로 인식되어 판로가 가격이 높았던 반면, 일본인이 선호한 도미, 삼치, 상어, 방어, 장어류는 수요가 많지 않거나 거의 없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 2) 참도미 선호의 문화사적 기원

조기를 선호하는 조선과 도미를 선호하는 일본이라는 차이는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었다. 도미는 한반도에서 풍부하게 서식했고, 18-19세기 조선에는 계절요리로 소비되어 상품화도 진행되었으나, “15세기 중반 이후 공납품이나 제례품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다”(58쪽). 반면 조선에서 조기는 “늦어도 18세기 이전부터 전국 시장에 유통되어 ‘도처에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어종이었다. 조기는 ‘조선인이 가장 기호하는 어류 중 하나로 관혼상제, 조상 제사, 마을 제사에 빠질 수 없는 의례적 필수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물고기’(60쪽)였다. 반면 일본의 도미는 조선의 ‘조기’에 상응했다. 의례적 중요성이라는 기준에서 일본의 도미는 조선의 조기와 같았다.

그러나 양자의 상동(相同)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숨어 있다. “조선의 조기가 ‘나라에 넘쳐 흘러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모두 귀중하게 여겼던 것에 반해, 일본의 도미는 어획량이 적고 가격이 높아 일부 계층만이 소비할 수 있었던 물고기였다”(60쪽). 상류층의 물고기였던 도미의 중

요성은 “신분적 제약 때문에, 민간에서 도미가 ‘특별한 시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를 담은 대상들’(민츠 1998)”(62쪽)이었다. 도미는 상류계급의 음식으로서 환상과 욕망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희소성과 상징적 가치로 인해 1920년대 이후 시작되어 1960년대의 대량생산까지 이어진 도미 양식을 촉발했다. 역설적으로 도미 양식은 도미의 급격한 가치하락을 야기했다.

### 3)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분석

‘조선과 일본 간의 물고기 이동은 조선 병합이후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어업기술 전반에서의 개량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종별 어획량에서의 양 민족 간의 격차는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물론 1912년 이후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 어민의 멸치, 조기, 대구, 청어 어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인도 일본식 어법을 채용하여 점차 일원화되는 경향으로 진행되었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 조선의 재래식 어업은 적어도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조선 병합 후 재래형 어선은 약 20년간 두 배 증가했고 1940년대까지 감소하지 않았다. 조선의 재래식 어업이 일본식 어업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912년 이후 조선인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는 거의 참여하던-‘참여하지 않던’의 오타로 보임- 도미, 삼치, 장어, 방어 어업에도 상당수의 조선 어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개항 이후 조선 어민들이 일본 수출 시장의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일본 어업기술을 받아들여 어획 어종의 확대해 나갔음을 보여준다”(72쪽). 식민지기 어업의 경제구조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는 지역적 차이인데,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안 북부에서는 재래형 어선이 전체 어선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서안 남부와 남안 서부의 전북 전남에서는 50퍼센트 이하였고, 경남에서 27퍼센트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지방에서 일본형 어선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73쪽). 일본인의 선호 어종을 어획할 수 있었고,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유통이 용이했던 지역에서 신기술의 도입과 일본인 선호 어종의 어획이 증가한 것이다.

## 4. 개념적 도구이자 이음새: 문화적 사실과 문화에 매몰된 경제

3에서의 요약은 논문의 세 ‘이야기’를 별개의 것인 듯, 떨어뜨려 놓았다. 첫째 분석은 통어 초기를 선호 어종의 차이라는 틈새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조선/일본 어민의 분업과 공존으로, 두 번째 분석은 일본에서 도미가 차지했던 차별적 가치의 기원-확산-절정-결말의 추이로, 세 번째 분석은 식민지기 조선의 어업-시장의 분화(分化)에 대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저자의 의도는 위의 요약을 포함하지만 보다 야심차다. 저자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꿰뚫는 단초를 제공하려 시도하는데, 문화적 사실과 문화에 매몰된 경제가 그것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스케일을 달리하는 세 개의 분석을 하나의 논문으로 묶는 두 개념에 의해 논문의 부분으로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저자는 “특정 물고기에 대한 민족적 선호, 즉 민족관습과 그것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맛이라는 원초성”을 연결시킨다(40-41쪽). “특정 맛에 대한 선호가 특정 집단의 원초적인 취향이 되는 과정이...(중략)... 매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41)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깔려 있는 ‘야심(?)’은 원초적이고 쉽사리 변하지 않는 선호어종의 의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식민지기를 전후한 어업 전반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설명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것이 리뷰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도미가 조선 식민화의 원동력’이라는 명제로 발전된다.

나는 저자의 의도와 시도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두 개의 개념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첫째, 문화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각주3에 제시된 정의를 보자. “문화적 사실은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 관습적 실천을 지칭하기 위해 필자가 사용한 개념이다. 개인을 구속하는 행위양식 사고양식 감정양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뒤르켐의 사회적 사실과 유사하지만, 장기적인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승되는 실천양식이자 그러한 실천양식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자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40쪽) 이에 따르면 문화적 사실이란 ①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 관습 ② 개인을 구속하는 양식 ③ 장기지속 ④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첫째,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같이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규칙만이 아닌 무의식의 차원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인가? 둘째, 장기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승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제도 상의 변동과는 다른 계열로서 다른 속도와 원리에 따라 연속/불연속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면 위 정의는 충분치 않다. 셋째, 도미의 문화사적 기원이나 조선에서의 도미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는 ‘의례적 사용’과 ‘사회적 욕망의 대상’이었는지의 여부였다. 이는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착된 사회문화적 의미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가능성과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제시된 문화적 사실의 정의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위에서의 설명을 다시 쓰자면, 조기와 도미는 역사적 구성물로 그 자신만의 역사를 지닌다. 특정 시기에 그것들은 마치 물신(fetish)과 같은 중요성을 부여받기도 하고 또 그 중요성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가치 상승과 하락의 리듬과 속도는 일반적인 경제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이 추이를 설명하는데 ‘문화적 사실’이라는 개념은 적절한가? 저자가 제시한 ‘문화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인 듯 보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구성’을 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쉽사리 변치 않는 상수(常數)인 듯도 하다. 저자는 문화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지점을 강조하려 했는가?

둘째, 경제가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칼 폴라니의 명제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경제체계가 역시 그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문화체계의 일부라는 일반 명제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조절적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경제 외적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자기-조절적이지 않다. 즉 ‘자본주의’의 경제의 원칙은 불가능한 슬로건이라는 것이다. 폴라니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훨씬 더 강조한다.



문화에 매몰된 경제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저자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개항 이후 조선 해에서 선호 어종의 차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적 층위로 인해 “상호 종속적이지 않은” 두 가지 어업 구조가 공존하며 동시에 성장“(74쪽)했다. “조선과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각기 상이하게 형성되어온 이질적인 문화 관습으로 인해 조선 시장과 일본 시장에 각기 대응하는 이중 어업 구조가 발전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74-75쪽)

위 구절에서 문화에 매몰된 경제에 조응하는 표현은 ‘선호어종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적 층위’,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형성되어온 이질적인 문화 관습’이다. 조선과 일본은 선호어종에 대한 독자적인 의미체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에 의해 서로 다른 ‘시장(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시공간에 걸쳐 ‘여러’ 시장과 경제(논리)들이 있다. 조기와 도미 시장 뿐 아니라 귀금속 시장, 예술품 시장, 가전제품 시장, 생활 필수품 시장 등은 각기 다른 원칙에 의해 나름의 ‘지역적’ 원칙을 지닌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화를 경제가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을까? 이는 경제체계가 보다 넓은 사회문화체계라는 일반론으로서의 ‘문화에 매몰된 경제’에는 들어맞지만, 두 번째 의미 즉 자기-조절적 시장의 근본적인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식민지기의 어업의 이중 구조화에서 문화에 매몰된 경제란 그 출발점에서의 도미 vs. 조기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이 주장은 착근성(embeddedness) 뿐 아니라 살린즈가 제시했던 문화 vs. 실용논리의 차이와도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일본을 위한 물고기 시장/조선을 위한 물고기 시장의 독자적인 발전이란 ‘민족관습을 고려한 시장의 분화’ 즉 문화(적 차이)를 포섭한 경제의 세분화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 저자 답변

오 창 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우리 학계는 “모두들 알만한 학자의 개념과 이론”을 공통분모로 삼아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론은 항상 현실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점을 감추면서 스스로의 완벽함을 드러내려 하기 위해, 아무리 훌륭한 독자이더라도 이론과 개념은 알듯 모르듯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알 듯 모를 듯 만들어놓은 이론과 개념을 ‘독해’하는至難한 작업은 연구자를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지식의 식민화로 이끌기도 한다. 경험 이론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론과 개념에 대한 ‘상호 독해’뿐 아니라 연구대상인 ‘경험’ 자체와 그것의 추상화 과정이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경묵(이하 A)과 서대승(이하 B) 두 분으로부터 리뷰를 받았다. 두 리뷰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마주서 대답을 찾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다. 현재 나의 문제의식이 누군가와 공유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학계’라고 부르는 것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 리뷰해준 두 분께 감사드린다. 장래 더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두 리뷰자와 함께 ‘시장’, ‘국가’, ‘근대’, ‘역사’, ‘식민성’이란 무엇이며, 그러한 개념이 지시하는 ‘실체’는 ‘문화’를 통해 어떻게 접근 가능한가를 논의해 보고 싶다. 그럼에도 앤스로피아 발간 일정상 나에게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기에, 나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쓰지 못한 것 같아 먼저 양해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

### 1. 힘의 차이와 그 기원

“만약 출발점으로서의 도미의 ‘힘’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효과의 스케일이 ‘식민화’의 상당부분을 포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위의 결론은 유럽의 향신료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설명력을 지녔을 것이다. 즉 두 문장의 차이는 논리가 아니라 힘에 있다.”

A의 지적을 요약하면, 양자의 논리적인 층위에서는 동질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논리를 구성하는 힘의 크기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이 양자의 논리적 상동성을 이해시켰다는 점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 A의 지적을 바꾸어 말하면, 보편적인 ‘인류학’적 층위에서는 논리적 상동성을 갖지만, 각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층위에서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 명제가 타당하다면, 앞으로의 논의에서 서양과 동양의 근본적인 차이를 대상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양과 동양(중국 중심의 동아시아문명권)은 분명 다르다. 또, 이 글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인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에서 단기간에, 겨우 수십 년 만에 ‘중심’으로 변모했던 지역이다. 또, 중심이었다고 해도 이전의 중국처럼 동아시아를 자신의 질서 아래로 포섭한 적이 없다. 조선(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제주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정확히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기 이전에는 서양 세계와는 완전히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 있었다.

이는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된 플라니의 이론이 동아시아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플라니(2009: 224)는 지역시장으로서 도시는 자기 공동체적 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자치 도시의 시민들은 마을 장터와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원거리 무역 모두에서 경쟁을 배제한다는 원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시장과 원거리시장을 분리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원거리 시장과 지역(농촌) 시장의 분리는 15~16세기 국민화(nationalization)와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가 출현해 중상주의 체제를 성립시키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국민화와 영토국가는 “도시와 농촌 사이, 또 여러 도시와 지방 사이의 교역이 예전에 부딪혔던 차별을 갈수록 무시해 버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주장했다(플라니 2009).

그러나 조선은 일찍이 국민국가는 아니지만 장기에 걸쳐 전근대적 영토국가를 성립시켜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전문분야인 어업 분야를 사례로 들어보면, 조선 전기인 15세기 이전부터 이미 왕실에 공급하는 공물과 진상품을 중심으로 전국적 어물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조선 중기 제정된 균역법은 지역별로 발달해온 다양한 어법과 제도를 상당부분 일원화시켰고 어선과 상선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로운 조업이 보장되었다. 조선왕조는 전근대의 중앙집권적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였기 때문에, 전국 유통망과 자유 이동(및 조업)이라는 전국 시장이 성립되기 위한 주요한 여건이 일찍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원거리 시장(여기서는 국제교역)과 지역 시장이 조선에서는 플라니가 제시한 사례와는 정반대로 작동해 왔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긴 이야기 대신에, 나는 A가 지적한 힘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상황과 매우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2. 사회문화체계로서의 시장

그렇다면 과연 근대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제 A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다.

“경제가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칼 플라니의 명제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경제체계 역시 그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문화체계의 일부라는 일반 명제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조절적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경제 외적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자기-조절적이지 않다. 즉 ‘자본주의’의 경제의 원칙은 불가능한 슬로건이라는 것이다. 플라니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훨씬 더 강조한다.”

먼저 A가 이해하는 플라니의 두 가지 명제는 과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후자는 간단히 말해 수요와 공급의 자기-조절적인 시장원리에 기초해 경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신화에 대한 제도경제학자의 비판이다. 사실 이러한 플라니의 비판이 한국사회에 얼마만큼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한국에서는 역사상 자기-조절적인 시장원리를 신봉했던 자본가나 경제학자가 지배적이던 적은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어도 20세기 이전까지 조선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시장은 항상 실패했고 국가는 시장을 지배하고 자본가는 국가의 행위자로서 순응해 왔다.

그럼에도 “시공간에 걸쳐 ‘여러’ 시장과 경제(논리)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플라니의 논의를 포괄할 수 없다는 A의 지적은 적확해 보인다. 이 논문은 가치(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불완전한 시장통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를 감싸고 있는 사회문화의 지배적인 형태를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제를 지탱하는 사회문화적 논리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분석대상으로서 국가가 명확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3장에서 ‘관습’을 전개할 때, ‘문화하강이론’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를 논의의 흐름을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 3. 불충분한 개념적 도구: 문화적 사실

“문화적 사실이란 ①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 관습 ② 개인을 구속하는 양식 ③ 장기지속 ④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첫째,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같이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규칙만이 아닌 무의식의 차원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인가? 사회제도 상의 변동과는 다른 계열로서 다른 속도와 원리에 따라 연속/불연속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면 위 정의는 충분치 않다. 셋째, 도미의 문화사적 기원이나 조선에서의 도미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는 ‘의례적 사용’과 ‘사회적 욕망의 대상’이었던지의 여부였다. 이는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착된 사회문화적 의미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가능성과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문화적 사실을 보는 저자의 용례가 틀리지 않았다. 다만, 논문에서 문화적 사실은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관행’을 하나의 분석적 차원으로 끌어오기 위한 분석적 도구였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 특정한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 혹은 행동들을 의미하는, 논문에서 ‘실천’이라고 말한 practice’은 사실 ‘관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다.

문화 분석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가치의 상대성뿐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서 문화의 상대성을 의미한다. 문화를 소위 ‘의미체계’나 ‘상징체계’로 가정할 때 (나는 그와는 다른, 보다 광의의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공유 단위를 가정한다. 한 지역인가 국가인가 등, 분석 단위에 따라 분석대상으로서 ‘문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계열적인 접근에서도 장기인가 단기인가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문화’가 달라진다.

나는 3장에서 두 나라의 수백 년 간의 변화추이를 몇 쪽 안에 넣어 단숨에 쫓아 올라가는 접

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A가 지적했듯이 “사회제도 상의 변동과는 다른 계열로서 다른 속도와 원리에 따라 연속/불연속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많은 관행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 받았던 받지 않았던 간에 관계없이, ‘관행’으로서 유지되어 왔다는 하나의 사실을 강조한다.

참여연구가 불가능한 장기 시계열적인 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짐멜의 형식과 내용의 구분을 따르며) 문화의 내용을, ‘문화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의 내용)이 각 시대별로 위치한 맥락을 읽어 문화의 형식을 추출해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문화’ 연구로부터 사회사적 연구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사회로부터 문화를 읽어내는 작업보다 새로우면서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어종 중에서 조기만 살아남았는가? 반면 조선 전기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강력한 의미체계 속에 있던 전복은 조선 후기에는 왜 상품화되지 못했고, 다시 말해 민간 관행 속에서 정착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문화적 사실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에게 문화인류학적인 역사적 해석과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이 개념은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문화의 상대성은 사회문화의 상대성뿐 아니라 문화의 내용, 즉 특정한 의미체계가 지시하는 대상의 자의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형식은 사회변동에 조용해 구축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의미체계, 우리가 흔히 ‘사회문화’라고 부르는 실체와 직접 관련된다. 이러한 의미체계는 반드시 ‘물질화’되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때 ‘물질’ 자체는 자의적이고 상대적이다. 즉, 문화의 내용은 항상 자의적이고 상대적이며, 각각의 역사적 특수성으로부터만 ‘설명’될 수 있다. 현재 사회(와 의미체계)는 항상 앞선 사회의 변형일 수 있지만, 현재의 문화는 과거 문화의 변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밖에 개념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속받을 뿐이다.

#### 4. 동아시아의 “식민성”, “근대성”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B의 논평은 ‘식민성’과 ‘근대성’이 상호 교차하는 식민지적 공간에 대해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비판은 이 논문이 ‘권력 에이전시’, 식민성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점이다. 식민성의 문제는 이미 역사학 쪽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특히 필자도 1장에서 인용한 조경달의 식민성 연구는 B가 언급하는 꼬마로프 부부의 논의를 포괄하며 한참 뛰어 넘어 있다. 식민성이나 근대성을 다루는 연구자라면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

나는 미시적인 의식 세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물을 배열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것으로부터 ‘식민성’과 ‘근대성’이 혼합되는 식민지 지식과 권력을 읽어내고 싶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근대 위에서 근대를 성립시켰다. 플라니의 ‘거대한 변환’은 동아시아에서 단 1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압축적이기 때문에 포착되기 어려운 여러 단층들을 찾아내는 일은 바로 사물에 대한 ‘지식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